

# 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1년 12월 보도자료([http://www.mohw.go.kr/front\\_new/al/sal/0301ls.jsp?PAR\\_MENU\\_ID=048&MENU\\_ID=0403]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D=0403)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## I

### 중앙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한 운영 방향 본격 논의

- 「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」제2차 회의 개최 (12.3) -

-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3일(금)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  -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부칙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출범예정인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며,
  - 지난 9월 24일(금)에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「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」을 의결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.
-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,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, 유관 공공기관 경영진,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등 총 9명의 설립위원이 참석하였다.
- 이날 회의에서 설립위원들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임원 추천 절차 등을 포함한「중앙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 세칙(안)」등을 의결하고, 중앙사회서비스원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■ 「중앙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 세칙」의 주요 내용은 임원(원장, 비상임이사, 감사) 추천과 자격 검증 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, 임원 후보자 모집방법과 심사기준 등이며,

○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,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 모집\*과 심사 등 임원 추천에 필요한 절차\*\*를 진행한다.

\* 임원 공모 예정 직위 수(안) : 원장 1명, 비상임이사 9명, 감사 2명

\*\*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자를 설립위원회에 복수 추천 →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후보자 복수 추천 → 장관이 임원 임명

■ 이어서 한국조직학회(성균관대 김근세 교수)가 수행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조직 설계 관련 연구 결과를 논의한다.

○ 설립위원회는 연구진이 제시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미션, 비전 및 전략체계안을 참고하여, 향후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직제 규정을 제정하고 2022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.

■ 양성일 제1차관은 “이번 2차 회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과 임원 추천을 위한 사항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”라며,

○ “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출범 전까지, 임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8968.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,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 법인설립팀. 2021.12.3.

II

**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, 첫 발을 떼다**

- 서울대학교병원 소아백혈병환자 대상 CAR-T치료, 고위험 임상연구 1호로 승인(12.8) -

■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,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12월 8일(수) 서울대병원(책임자 : 소아청소년과 강형진 교수)이 신청한 임상연구 계획\*이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령」(이하 ‘첨단재생바이오법’)의 시행(2020.9월) 이후 첫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.

\*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 소아 및 청소년 대상 병원 생산 CD19 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 (SNUH-CD19-CAR-T)의 제 1b상 임상연구

\*\* CAR-T(Chimeric Antigen Receptor-T cell): 면역세포(T세포)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,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

○ 이번 건은 ‘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’ (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제3호 가목, 이하 ‘고위험 임상연구’)로, 고위험 임상연구\*의 경우 이전의 치료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등이 가능하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었다.

\*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, 임상연구 계획 등에 대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 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후 연구 실시 가능

-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(이하 ‘심의위원회’)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건이 1호 고위험 임상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제출받은 임상연구계획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실시역량, 연구 대상 보호 여부,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였고,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완료\*하였다.

\*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 임상연구계획 신청(21.4.30) → 심의위원회 적합 의결(5.27) →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자료 송부(6.15) →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 승인(12.8)

**< 現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·승인 절차 >**



■ 이번에 승인된 임상연구는 CAR-T를 사용한 소아청소년 급성 림프모구백혈병\*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다.

\* 급성림프모구백혈병: 백혈구 중 림프구 계열의 세포가 악성으로 증식하는 질환으로 소아 백혈병의 약 80%를 차지

○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들은 그동안 항암화학요법\* 등의 치료를 받아왔으나, 재발성·불응성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로는 백혈병 세포가 감소하지 않아 백혈병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.

\*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원리로,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기존의 증식 세포(골수, 점막, 머리카락 등)도 동시 공격

○ CAR-T를 사용한 치료는 암세포만을 정확히 표적으로 삼으면서 체내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여 치료의 효과도 높이며, 기존 치료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■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“이번 고위험 임상연구 1호 승인 이후 다양한 희귀난치질 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고,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하며,

○ “정부도 임상연구계획 심의 등 법령에서 요구되는 안전성, 유효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, 임상연구비 지원사업·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의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8982.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·심의위원회 사무국,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TF, 2021. 12. 8.

Ⅲ

**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 
공개토론회 개최(12.14)**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한국보육진흥원(원장 나성웅)과 12월 14일(화) 오후 2시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“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”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(이하 포럼)를 개최하였다.
  
-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올해 「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모의 적용 연구」를 진행하였으며,
  - 현재 보육교사 자격은 ▲<sup>(2급)</sup> 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17과목(51학점), ▲<sup>(3급)</sup>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2과목(65학점)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학점제의 개방형 양성체계이나,
    - 보건복지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과를 ‘인정’하여 특정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검토 중이다.
  - 본 포럼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행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재검토하고 각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하였다.
  - 이번 포럼에는 △4년제 대학, 2·3년제 대학, △원격대학, △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△보육교사교육원, △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,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.
  
- 첫 번째 발제는 오산대학교 권기남 교수가 “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체계 개편 필요성 및 추진경과”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, 두 번째 발제는 서경대학교 민미희 교수가 “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및 모의적용 심층면담 결과”를 주제로 발표하였다.
  -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7명의 토론자\*가 현장 의견을 반영한 토론을 진행하였다.

\* (참여자) 정효정 중원대학교 교수, 장혜자 대덕대학교 교수,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, 정현덕 한국학점은행제교육협의회

이사, 최병태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회장, 백복순 만리어린이집 원장,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

-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“그간 무상보육이 도입되고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는 등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인적·물적 인프라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, 급변하는 정책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.”라고 밝히면서,
- “오늘 포럼에서 보육교사 양성기관과 어린이집의 관계자들이 제안한 과제들을 꼼꼼히 살피고,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과 더불어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012.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, 한국보육진흥원, 2021.12.14.

IV	<p><b>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이행 상황 점검</b></p> <p>- 복지부(제1차관 주재), 교육부, 법무부, 행안부, 여가부, 경찰청, 권익위 등 국장급 참석 -</p>
----	---

□ 전국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(730명) 배치, 즉각 분리제도 시행,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,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주요 실적 점검과 함께 신고 의무자 보호 강화 방안,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등 추가 보완 과제 논의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그간 발표한 아동학대 대책\*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이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.

\*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(2020.7)」, 「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(2021.1)」, 「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 방안(2021.8)」

-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여성가족부, 경찰청이 각 부처 소관 아동학대 대응 관련 과제의 추진 현황 및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,
  -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에서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다.

■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국 확대\* 및 즉각 분리제도 도입\*\*을 통한 초기 대응력 강화에 더해 중앙부처 간, 중앙-지방 간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예방-발굴-조사-보호-사후지원의 전 단계를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.

\* (아동학대 조사 공공화) 아동보호전문기관(민간)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제도

\*\* (즉각 분리제도)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하는 제도

- 또한 올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당초 기준인건비 배정인원인 664명을 상회하여 730명을 배치하였다. (2021년 11월 5일 기준)

- 내년에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,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정하였으며,
-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정원 반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실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.
- 더불어,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을 통한 경찰과의 협업체계 구축, 직무교육 확대\*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다.

\* 신규자 교육 확대(2주 80시간→4주 160시간), 경력자 보수교육 신설(40시간), 전담공무원-아동보호전문기관-경찰 합동교육 실시

- 또한, 내년에는 실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\*를 시군구(229개) 당 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(11억 원)을 신규로 추진 예정이다.

\*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중 녹취록 작성이 32.8% 차지

- 3월부터는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 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,

- 분리된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쉼터 29개소(76→105개소), 일시보호시설 7개소(7개 시도 10개소→13개 시도 17개소)를 설치하고 만 6세 미만 대상 위기가동 보호가정 200가정을 마련하는 등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.

- 더불어, 아동학대 대응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\*(2021.6월)한 것을 계기로, 2022년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\*\*하여

\* 아동보호전문기관(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, 287억원), 학대피해아동쉼터(기재부 복권기금, 87억원) 관련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

\*\* (2021년) 423억 원 → (2022년) 618억 원 (46.1%↑)

- 2022년 아동학대피해쉼터 141개소(신규 36개소), 아동보호전문기관 95개소(신규 14개소)의 설치·운영비를 확보하는 등 인프라를 적극 확충할 예정이다.

-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는 ‘긍정 양육 129원칙’을 배포하여 처벌 금지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 양육을 독려하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.

- 또한, 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해 처벌강화TF를 구성(2020.10월~)하여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고, 보건복지부 장관-양형위원장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(2021.1.21.)하였다.

- 이에 따라, 제8기 양형위원회(2021.4~2023.4)는 양형 기준 수정 대상에 아동학대범죄를 선정하여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\* 중이며, 내년 3월 양형 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·시행할 예정이다.

\* 범죄 유형 분류에 ‘아동학대’ 대유형 신설, 양형 기준 적용 대상 행위 확대(아동학대 살해, 아동매매·성적 학대 등), 아동학대처사(최대 징역 22년 6개월) 등에 대한 권고형 상향(10.8, 12.6)

- 아동복지법 개정(2021.6.)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에 강제력을 부여\*하고, 전담의료기관을 작년 말 1개소에서 올해 11월 기준 264개소로 확대하는 등 사후지원도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.

\*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

- 또한,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‘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’ 분야를 신설하여,

- 충남 천안시, 부산광역시, 전라북도 전주시 등 2개 시·도, 6개 시·군·구에 장관상과 총 6,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.\*

- 더불어 부처 간 정보 연계\*로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, 발굴된 위기 아동 정보를 교육부에 공유하여 교육 현장에서 아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.

\* 교육부(학교·유치원 장기결석), 여가부(학교 밖 청소년), 경찰청(가정폭력)

- 또한, 법무부·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보호자의 체포·구속 시 보호 대상 아동 정보를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통보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였다.

■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배정한 것에 더해 내년에도 전담공무원을 추가 보강하기로 하였으며,

- 185개 시군구 업무 차량 구입 지원(특별교부세), 현업공무원 지정 권고, 특정업무경비 편성(월 5만 원) 등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개선하였다.

-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'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율'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·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속 독려한다.

■ 경찰청은 시·도 경찰청에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, 학대예방경찰관(APO)을 지속 확대\*하는 등 아동학대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.

\* 2021.11월 기준 정원 671명, 현원 739명,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260명 경력 채용 예정

- 또한, 보건복지부와 함께 '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협의체'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, 아동보호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, 일선에서 아동학대 대응에 힘쓰고 있다.

■ 교육부는 올해 의무교육단계에 진입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,

\* 취학대상아동 449,821명 중 449,787명 소재 확인 완료(미확인 국내 2명, 해외 32명 수사 진행, 2021.2.)

-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등교학습 지원을 위한 방안\*을 마련·시행하였다.

\* 일시 보호 중인 아동이 학적변경 없이 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, 신청 절차, 지원 기간, 관리 주체 등 세부 내용을 안내(2021.10)

- 내년에는 학대피해학생의 경우, 보호자 동의 없이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, 복지부로부터 공유받은 위기아동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.
  
- 법무부는 올해 1월, 민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,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(500만 원→1,000만 원)하는 등 현장조사 이행력을 강화하였다.
  - 또한,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위탁을 추가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.
  
- 여성가족부는 가족상담전화(1644-6621)와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 상담,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아동학대 및 가족 문제 예방을 지원하며, 아동학대 대응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가기로 하였다.
  - 또한, 앞으로도 아동학대 위기 아동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.
  
-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독려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.
  
-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“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의 관건은 관계부처 간 협업에 달려있다.”라며,
  - “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, 위기아동 조기 발굴부터 피해 아동 및 가정의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단계의 과제들을 내실화해 나가자.”라고 강조하였다.
  - 마지막으로 “각 부처 직원 및 소관 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독려해 달라.”라고 덧붙였다.

**참고**    **대응 단계별 주요 실적**

단계	주요 성과
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법상 징계권 폐지(법무부, 1.26)</li> <li>• 양형기준 개선제안서 양형위원회 제출(복지부, 1.21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범죄유형분류에 '아동학대' 대유형 신설, 양형기준 적용대상행위 확대(10.8), 아동학대처사(최대 징역 22년 6개월) 등 권고형 상향(12.6)</li> </ul> </li> <li>•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* 추진, '긍정 양육 129 원칙' 선포(복지부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실천 선언(5.31), 징계권 폐지 계기 915캠페인(9.15)</li> </ul> </li> <li>• 가족상담전화(1644-6621),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상담·부모교육(여가부)</li> </ul>
위기아동 발굴 및 초기 개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및 만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한 아동 안전 확인(복지부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8만7천명 아동 안전 확인하여 2,199명 복지서비스 연계, 121명 아동학대 신고('21년 11월 기준)</li> </ul> </li> <li>• 의무교육단계 진입 아동(45만명) 전수 소재·안전 확인(교육부)</li> <li>• 복지부-교육부 간 학대 위기아동 정보공유(복지부, 교육부)</li> <li>• 만2세 미만 영유아 대상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(복지부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21년 29개소 → '22년 50개소 → '24년 전국 258개소</li> </ul> </li> </ul>
조사 및 초기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국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30명(목표대비 110%) 배치(복지부)</li> <li>• 학대예방경찰관(APO) 지속 확대(21년 11월 739명, '23년까지 260명 경력 채용)(경찰청)</li> <li>• 아동학대전담공무원-경찰 간 협업을 위한 공동업무수행지침(4.2) 시행(복지부, 경찰청)</li> <li>• 전담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한 완화(57→70시간), 특정업무경비 반영(5만원),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, 차량구입 지원(185개) 등 대응인력 업무여건 개선(행안부)</li> <li>• 전담공무원 신규자교육 강화(80시간→160시간) 및 경력자 보수교육 신설(40시간), 전담공무원-경찰-아보전 합동교육 신설(복지부)</li> <li>• 현장 출입범위 확대 및 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(아동학대처벌법 개정)(법무부)</li> </ul>
분리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즉각 분리 제도 도입(3.30), 아동 의사 확인·존중 등 아동이익 최우선 고려토록 지침 마련·시행, 대응 인력 교육(복지부)</li> <li>• 학대피해아동쉼터('21년 105개소 → '22년 141개소), 일시보호시설('20년 10개소→'21년 17개소), 만6세 미만 위기아동보호사업 신설(200개 가정)(복지부)</li> <li>• 분리보호 중인 아동 학습권 보호를 위한 등교학습 지원방안* 마련(교육부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학적 변경 없이 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</li> </ul> </li> </ul>
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보전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(300만원 이하) 부과 기준 마련(복지부)</li> <li>• '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' 시범사업(1,000가정) 예산 확보(복지부)</li> <li>•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('20.12월 1개소→'21.11월 264개소), 17개 시·도 거점 아보전에 심리지원팀 설치 및 전문인력(3인) 배치(복지부)</li> <li>•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상담·부모교육·원가정회복지원사업('20.4개소→'21.8개소) 지원(여가부)</li> </ul>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033.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,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, 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,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,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, 경찰청 아동청소년과, 2021.12.17.

V

**나의 건강관리 친구 ‘나의건강기록’ 앱, 완전 만족합니다**

- ‘나의 건강기록 앱 이용 후기 공모전’ 총 10편의 수상작 발표(12.22) -

■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, 한국보건 의료정보원(원장 임근찬), 한국보건산업진흥원(원장 권순만)은 12월 22일(수) ‘나의건강기록’ 앱\* 이용 후기 공모전의 시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.

\*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·건강검진 이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,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통합적으로 조회·저장·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(앱)

○ 이번 공모전은 “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온 내 일상의 변화”를 주제로 하여 11월 22일(월)부터 12월 3일(금)까지 12일 동안 진행되었으며, ‘나의건강기록’ 앱 사용자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들이 총 57건이 접수되었다.

■ 최종 선정된 수상작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○ 대상을 받은 배희원님은 편두통이 갑자기 심해져 동네 내과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처방받았던 편두통 약 이름을 잠시 잊어버렸지만, ‘나의건강기록’ 앱을 통해 잊어버린 약 이름을 확인하여 편두통을 해결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.

○ 우수상을 받은 전셋별님은 폐암 4기 엄마가 처방받은 수많은 약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을 ‘나의건강기록’ 앱을 통해 해결하고, 다음 외래 때 처방받아야 할 약 목록과 약제비 영수증 발급 시점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일상이 윤택해졌다고 말했다.

○ 우수상을 받은 이우진님은 코로나19 안센 백신 접종자로서 과거 예방접종 시점이 기억나지 않았으나, ‘나의건강기록’ 앱을 통해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점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.

○ 우수상을 받은 이연님은 20대의 나이로 당뇨병에 걸려 10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고 3~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, ‘나의건강기록’ 앱에 혈당 기록을 연동하여 하나의 앱만 설치해도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.

■ 최종적으로 대상 1편, 우수상 3편, 장려상 6편 등 총 10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, 이들에게는 한국

보건의료정보원장상과 소정의 상금\*이 수여되었다.

\* 최우수상 50만 원, 우수상 20만 원, 장려상 10만 원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수여

○ 향후 ‘나의 건강기록’ 앱 이용 수기 공모전의 수상작을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, 전국적으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.

■ 한편, 현재 ‘나의건강기록’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뿐만 아니라 iOS 버전(아이폰용)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며,

○ 향후 ‘나의건강기록’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가능하게 하고(2022.1월 출시 예정), ②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(UI/UX\* 등)도 병행할 계획이다.

\* 사용자 인터페이스(User Interface) / 사용자 경험(User experience)

■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“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경험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모습을 생생하게 파악하고, 국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.”라고 말하며,

○ “앞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, 일상건강정보\*(lifelog)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\* 혈압, 혈당, 운동량 등 개인이 스마트기기의료기기를 통해 스스로 측정한 정보

## 참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개요

■ (마이 헬스웨이) 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(동의 기반)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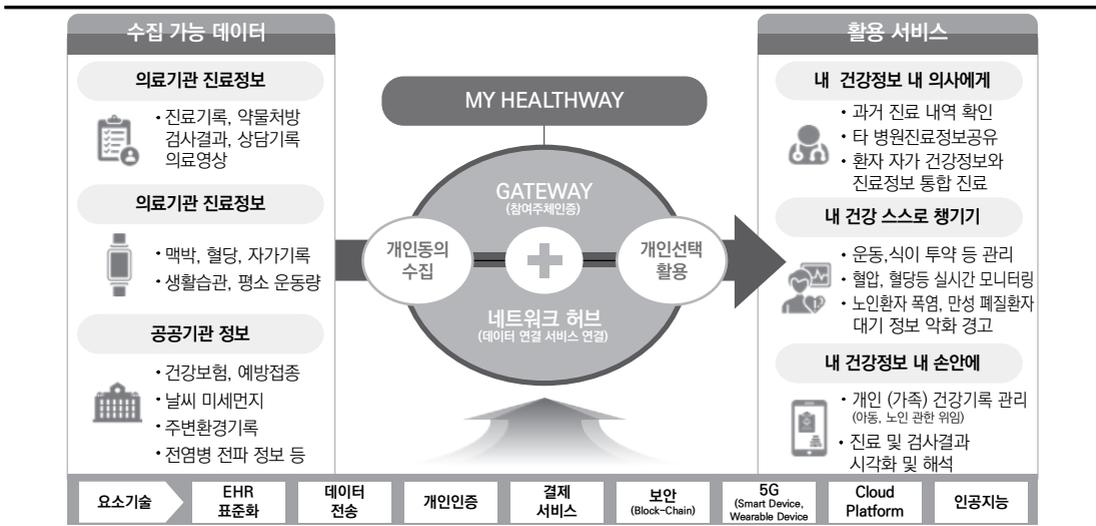
\*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(네트워크 허브) 수행

○ (수집 데이터)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(의료, 생활습관, 체력, 식이 등)를 한 번에 조화·저장

\*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의료기관 진료정보에서 비의료 건강정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

- (활용 서비스) 정보주체가 저장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진료,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(개인정보 인증·동의) 개인의 동의 하에 조화·저장·제공되도록 하고, 인증·식별 체계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

〈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(안) 〉

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054.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,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PHR사업부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이의료데이터추진TF, 2021.12.23.